

# 가해자 진술 무검증 인용... '오류의 역사화' 걱정된다



## 5·18 진상보고서 이대론 안 된다

### <2> 왜곡 불씨 안고 있는 보고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개별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자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탄식이 나왔다. 계엄군은 물론 광주시민도 책임이 있다는 '양시 양비론'(兩是兩非論)을 거기에 둔 증언과 조사 내용들을 수록하면서 오히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등 왜곡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사회와 오월단체 등은 보고서 폐기 등을 주장하며 "오류의 역사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기고 피탈 시점 등 부실 조사 시민군 선제 무장설 등 왜곡 우려 조사 결과, 법원 판결보다 퇴보 광주 시민들 "우려가 현실로" 탄식

대표적으로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금남로 발포경위에 대한 사실규명에서 결정적 한계를 보였다. 진상조사위는 '권용운 일병 사건'에 대해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진상불능결정을 내렸다. 권 일병을 친 장갑차가 계엄군 장갑차인지 시민군 장갑차인지 특정할 수 없고 총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권 일병 사건은 계엄군의 '자위권 차원의 발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다. 계엄군은 1980년 5월 21일 권 일병이 돌진하는 시위대의 장

갑차에 치어 숨지자 자위권을 발동해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계엄군은 "시민군이 권 일병을 권총으로 쏘 사살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진상조사위원 중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진상불능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 것도 "검시 조서를 확인한 결과 사인이 '총상'으로 돼 있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 일병이 시위대 장갑차에 의해 숨졌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과거 법원 판단보다 후퇴한 결론을 낸 것이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왜곡인 '전남 일대 무기고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부실한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기존 조사보다 퇴보한 결론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보고서에서는 일부 무기고 피탈 시점이 엇갈리고, 부실 조사로 인해 '진위 여부 확인 불가' 결론을 내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이 보고서는 전남도경상항일지를 인용해 시민군의 무기 피탈이 오전 9시께 나주 무기고를 피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시민군이 계엄군의 집단발포에 앞서 '선제 무장'을 했다는 계엄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광주지방법원, 전남도경찰청 등이 과거 전남도경상항일지가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과거 조사에서는 전남도경상항일지에 경찰이 보유하고도 않은 경찰 장갑차가 피탈됐다고 적혀 있거나 표지와 본문의 내용이 상이하고, 당시 경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한자 표기 방법과 다른 표기 방법이 사용된 점 등이 다수 발견됐다.

가해자인 계엄군의 진술을 검증 없이 무차별 인용하고 나열하는 식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점도 하자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에 인용된 계엄군 진술에 대한 검증 절차는 생략됐으며, 1995년 검찰 수사에서 반복된 바

있는 계엄군의 진술을 아무런 부연 설명없이 그대로 전제하기도 했다.

더구나 보고서에는 계엄군 입장을 대변하거나 광주시민을 학살한 당사자들에게 선별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문구까지 포함됐다.

'군·경 피해' 보고서에는 '대다수 계엄군은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뿐'이라는 결론에 더해 '계엄군은 가해자, 광주시민은 피해자라는 흑백논리가 만연해 있다',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에 대해 폭력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등 오히려 피해자인 광주 시민들을 탓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계엄군 누군가의 진술을 검증 없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실고 '시민군 오전 무장설' 등 왜곡 근거로 쓰고 있으니 황당한 일"이라며 "보고서가 수정되거나 폐기되지 않으면 국가차원의 보고서가 5·18 왜곡을 공식화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며, 어렵게 제정한 5·18왜곡 처벌법까지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정당현수막 5·18 왜곡 금지' 광주시 조례 유지

행안부서 판지 걸었지만 법무부 유권해석 바탕 수정 않기로

행정안전부가 정당의 현수막에서 5·18 왜곡·비방을 금지한 광주시의 조례를 문제삼은 것(4월 4일자 광주일보 7면)과 관련, 광주시가 현행 조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당현수막 내용상 5·18 왜곡·비방 금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행안부로부터 시의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중 5·18 왜곡 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수정 요청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을 행정동 당 2개 이하로 제한한 데 따라 광주시도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돌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광주시 조례 중 5·18 비방·폄훼 금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조항에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5·18 관련 내용은 이미 5·18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옥외광고물법에 추가할

이유가 있느냐며 사실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중 5·18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5·18 왜곡 방지법에서 규정한 금지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했다.

법무부는 "5·18왜곡방지법은 '전시물'의 정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현수막의 게시 내용, 장소 등을 종합 판단해 전시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개별 사안에서 범죄 성립 여부는 사람마다 제반 사정과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을 내렸다.

이는 사안별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인지 5·18왜곡방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따로 봐야 하며, 두 법령이 가리키는 처벌 대상이 각각 달라 중복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이미 정당현수막을 통한 5·18 왜곡이 발생했던 만큼,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례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 5·18 관련 내용은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전통 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광주시 북구 직원과 안전보안관 등 유관 단체들이 28일 전남대 후문 일대에서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홀로 양육 두려워" 신생아 시신 유기 친모 영장 신청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유기해 숨지게한 20대 친모가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8일 아동학대 살해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고 신생아를 받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A씨는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화장실에서 출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두려워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상가 관계자가 신생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출소 4년 만에 또...살인 혐의 60대 법정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재판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하자 4년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63)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15일 새벽 1시 30분께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여성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만취상태였던 A씨가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

다.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 제주 서귀포시에서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감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감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감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감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